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외인 사망률은 1997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으로, 운수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자살률은 2018년 이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인다.
- 최근 들어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건축물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해,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부상자 수는 소폭 증가하였고 재산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9년에는 도로와 해양사고가 증가하였다.
-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율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산업재해율은 낮고, 산재사망률은 높은 수준이다.
-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범죄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범죄의 증가로 강력범죄(총약)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교통범죄는 크게 감소하였다. 2018년에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범죄 발생 건수만 증가하였다.
- 일반 국민들의 범죄피해 경험률은 201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야간보행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OECD 평균 수준이다.

안전은 크게 자연재난, 인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등의 자연현상이나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과 같이,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안전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사회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 테러, 자살 등이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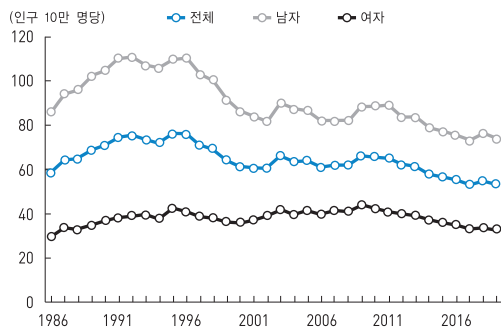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이후부터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인 사망률은



모든 사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남성이 경제활동과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에도 외인 사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외인 사망률은 10만 명당 53.1명으로 전년도 54.7명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73.8명으로 전년도 76.1명보다 감소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32.6명으로 전년도 33.3명보다 감소해 남성의 감소 폭이 여성보다 더 컸다(그림 X-1).

[그림 X-1] 성별 외인 사망률, 198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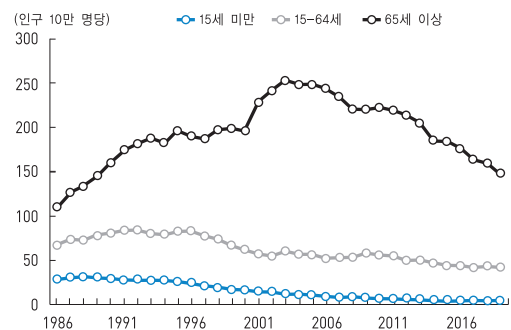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연령대별로 보면 15세 미만의 외인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4.2명으로 나타났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외인 사망률도 1996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

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42.1명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 역시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18년 현재도 인구 10만 명당 147.8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X-2).

[그림 X-2] 연령집단별 외인 사망률, 1986-2019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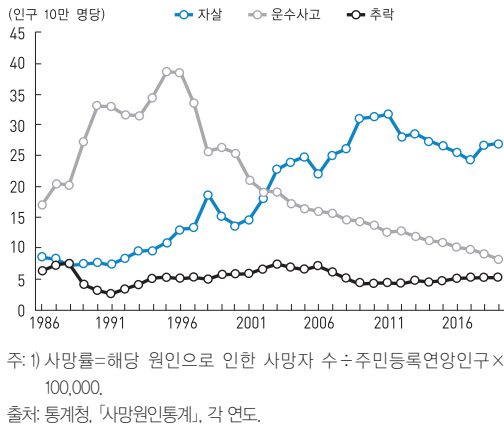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이었다. 자살률은 1992년부터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인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199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99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전년 26.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운수사고



는 9.1명에서 8.2명으로 감소하였다. 추락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2명으로 2017년 이후 발생률이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다(그림 X-3).

[그림 X-3] 주요 외인별 사망률, 1986-2019



자연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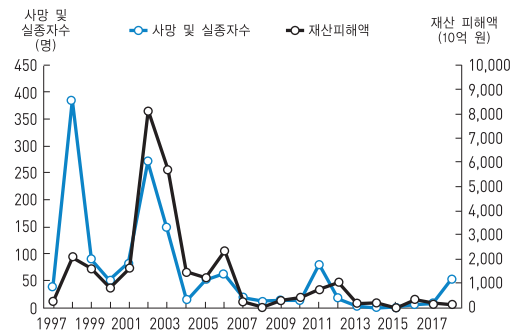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그리고 2006년 에위니아 등의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에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7년 7명에

서 53명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재산피해액은 2017년 1,910억 원에서 1,41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사망 및 실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48명)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 2020).

[그림 X-4]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1997-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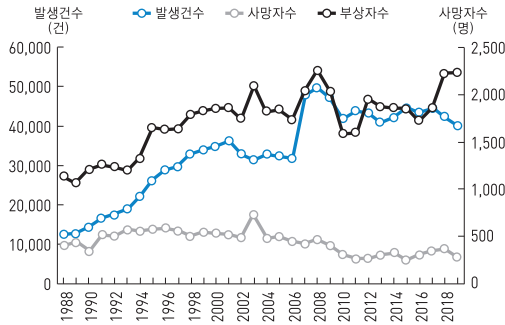
인적 사고

화재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재 발생 건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부터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0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다(그림 X-5).



[그림 X-5]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1988-2019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ids.go.kr/index.jsf>), 각 연도.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증가한 후 2003년의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꾸준히 감소하던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3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0명 내외 수준을 보였다. 다만, 2018년에는 최근의 흐름과 달리,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20.1%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X-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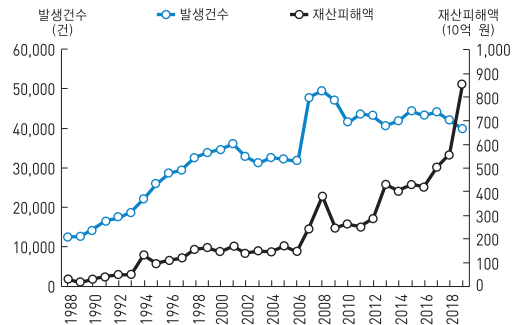
2019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40,103건)가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285명)는 22.8%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수(2,230명)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0.2%)(그림 X-5).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재산피해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증가가 더 큰 것은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도의 경우 재산피해액의 가파른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화재 발생 건수(40,103건)가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음에도 재산피해액(8,585억 원)은 전년 대비 무려 53.4%나 증가하였다(그림 X-6).

[그림 X-6]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198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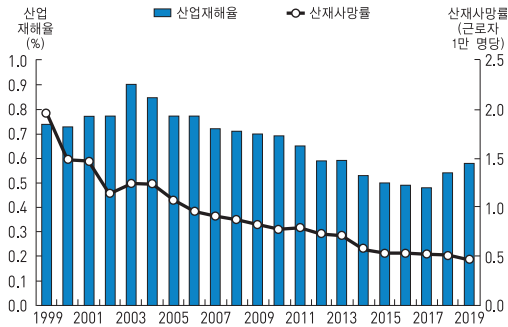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nids.go.kr/index.jsf>), 각 연도.

산업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 최근 20여년간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산재사망률은 1999년 근로자 1만 명당 1.96명이던 것이 0.4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산업재해율은 2003년까지 소폭 증가



[그림 X-7]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199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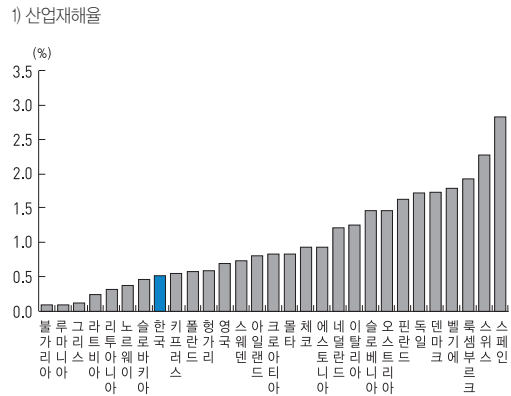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2) 산재사망률=(업무상사고 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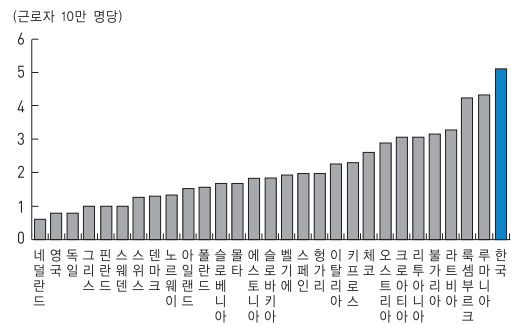
하였으나(0.90%), 그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0.48%). 다만, 2018년과 2019년 소폭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 이후 추세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그림 X-7).

일반적으로 산업안전이 발달하고 산재보상 수준이 높은 나라는 산재사망률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높다. 이는 산업재해율은 실제 산재사고 통계라기보다는 근로자 중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산업재해율은 낮은 편이나 산재사망률은 매우 높은 국가라 할 수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2018년 기준 0.54%로 29개국 평균인 1.00%에 비해 낮고, 불가리아(0.08%), 루마니아(0.09%), 그리스(0.12%), 라트비아(0.24%), 리투아니아(0.32%), 노르웨이(0.37%), 슬로바키아(0.46%)에 이어 하위 8번째이다. 반면, 산재사망률 면에서는 유럽 평균인 근로자 10만 명당 2.00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5.10명이다(그림 X-8).

[그림 X-8]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18



2) 산재사망률



주: 1)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은 유럽과 비교하기 위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재해자만으로 산출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2018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9.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Statistical Explained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

교통사고

지난 10여 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X-9).

도로사고 발생 건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부상자 수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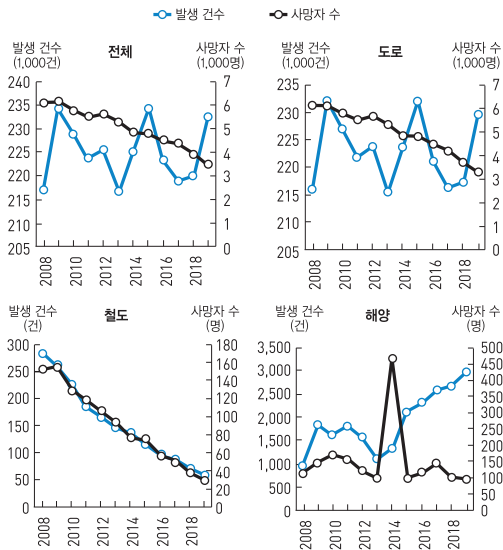


양사고는 2007년 이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07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X-9).

2019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만 2,637건으로 전년 21만 9,898건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사고와 해양사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사상사고 발생 건수는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서울에서만 2017년은 2건,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건씩 발생하였고,

[그림 X-9]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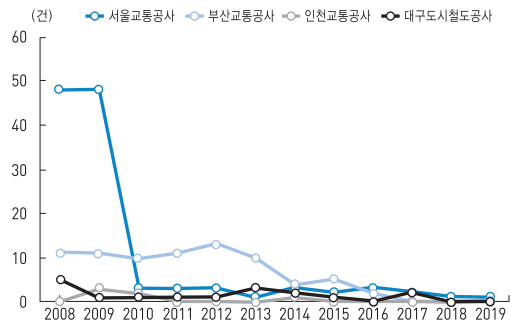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부산, 인천, 대구 모두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자살이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지하철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후 사상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은 2007년 65건이었으나, 2010년 스크린도어 설치 후 최근 3년간 1-2건대로 감소하였고, 부산 역시 2007년 12건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 3년간은 사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X-10).

[그림 X-10] 도시철도 사상사고 건수, 2008-2019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각 연도.

사회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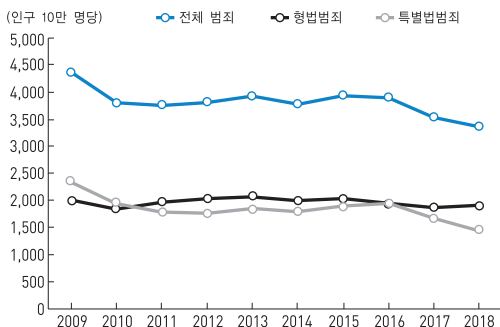
범죄발생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 인구 10만 명당 4356.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2018년에는 3353.9건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20년간 최저치이다. 전체 범죄에는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의 형법범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을 포함하는 특별법 범죄가 포함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형법범죄 발생률은 소폭의 변화만 관찰되고 큰 폭의 증감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특별법범죄 발생률은 2009년 이후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 결과 2010년을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특별법범죄 발생률이 형법범죄 발생률보다 높으나, 이후에는 형법범죄 발생률이 특별법범죄 발생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X-11).

2018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73만 8,19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3,35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 범죄는 발생 건수 면에서 전년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간 19.8% 감소하였다. 형법범죄는 98만 8,398건(인구 10만 명당 1,907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1% 증가한데 비해, 특별법범죄는 74만 9,792건(인구 10만 명당 1,454건)으로 전년 대비 13.4% 감소하였다(그림 X-11).

[그림 X-1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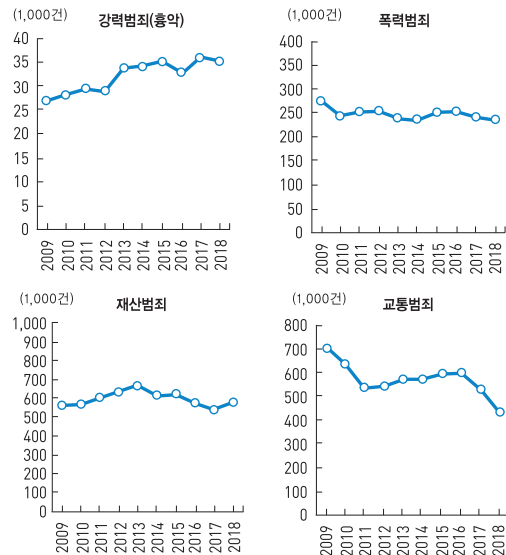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 ÷ 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범죄유형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 추이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강력범죄(흉악)의 증가와 교통범죄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강력범죄(흉악)는 2009년 2만 7,014건에서 2018년 3만 5,272건으로 30.6% 증가하였고, 재산범죄는 56만 2,065건에서 57만 6,937건으로 2.6%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70만 7,473건에서 43만 3,350건으로 38.7% 감소하였고, 폭력범죄는 27만 3,973건에서 23만 3,392건으로 14.8% 감소하였다(그림 X-12).

2018년에는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그림 X-1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2009-2018



주: 1) 강력범죄(흉악)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범죄만 6.4% 증가하였고, 교통범죄(18.2%), 폭력범죄(2.3%), 강력(흉악)범죄(2.1%)는 감소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강력(흉악)범죄가 소폭 감소한 현상이 주목할 만하다(그림 X-12).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유형인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등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 범죄와 방화범죄는 완만한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방화범죄를 제외한 4개 범죄유형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그간 뚜렷한 상승세로 전체 강력범죄(흉악)의 증가를 주도하던 성폭력범죄가 감소한 점이 두드러진다(표 X-1).

〈표 X-1〉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별 발생 건수,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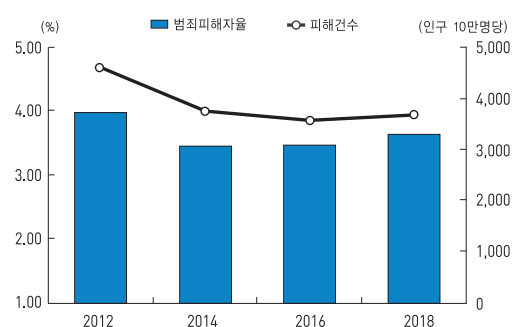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09	1,390	6,381	17,377	1,866	250,537
2010	1,262	4,402	20,584	1,886	224,300
2011	1,221	4,021	22,168	1,972	232,229
2012	1,022	2,626	23,365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0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2018	849	841	32,104	1,478	208,935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범죄피해

일반적으로 범죄분석에 사용되는 공식범죄통계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집계되는 통계로,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숨은 범죄(hidden crimes)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를 포함하는 범죄피해 통계는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이었다가,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여 3.63%이다(그림 X-13).

〔그림 X-1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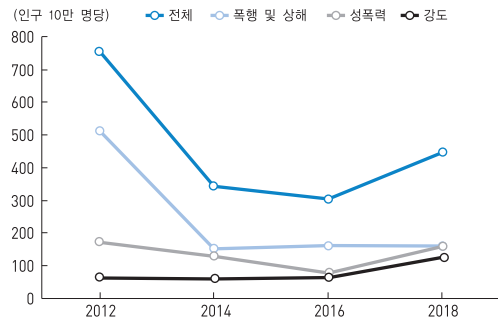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 건수 기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피해자 비율은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이 중 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2012년 조사시 인구 10만 명당 755건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2018년 조사에서는 447건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유형인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 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폭력 범죄와 강도범죄 피해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 건수는 각각 인구 10만 명당 161건이며, 강도범죄 피해 건수는 125건이다(그림 X-14).

[그림 X-1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12-2018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 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형사사법기관에 신고 혹은 인지된 성폭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표 X-1), 범죄피해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피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그림 X-14), 최근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발생률의 증가 현상은 실제 발생

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신고율의 증가로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찰력 및 소방력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5년 9만 5,336명에서 2019년 12만 2,913명으로 증

〈표 X-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5-2019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05	95,336	505	29,362	1,641
2006	95,613	507	30,199	1,604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2017	116,584	441	48,042	1,069
2018	118,651	435	52,245	988
2019	122,913	421	56,647	913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가하였고, 같은 기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5명에서 421명으로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5년 2만 9,362명에서 2019년 5만 6,647명으로 증가하여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641명에서 913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X-2).

안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8.2%에 불과했으나, 2014년 9.5%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2018년 2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치안)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조사 시점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2008년과 2014년에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및 범죄위험까지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8년에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2014년에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 것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되며,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표 X-3).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였는데, 1997

〈표 X-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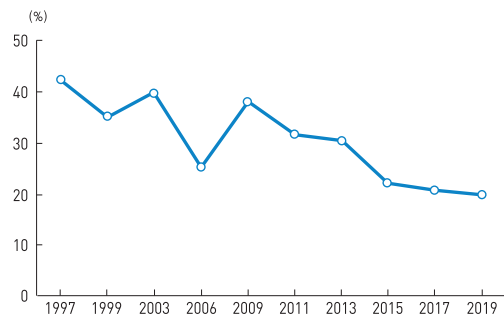
	(%)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전반적인 사회안전	8.2	11.3	13.8	9.5	13.2	20.5
자연재해	17.2	18.7	23.2	15.1	20.7	22.7
교통사고	5.7	8.0	9.3	7.3	10.3	13.1
화재	9.9	16.6	17.7	14.2	19.1	21.0
범죄위험(치안)	-	8.2	9.1	8.9	9.2	17.2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단, 2008년과 2010년 자료의 경우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2008년에는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15〕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19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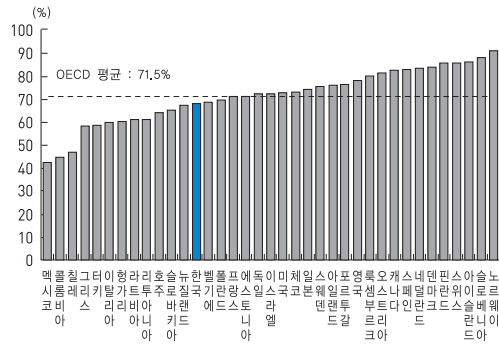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997-2006;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2019.

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7년에는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에는 19.8%로 나타났다(그림 X-15).



한국의 야간보행안전도(‘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는 68.4%로, OECD 국가 평균인 71.5%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노르웨이(91.2%), 슬로베니아(88.3%), 아이슬란드(86.2%), 스위스(85.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2.5%), 콜롬비아(44.9%), 칠레(47.0%), 그리스(58.3%), 터키(58.6%)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림 X-16).

[그림 X-16]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18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202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